



냉혈인들

고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을 크고 강하게 건설하자 노동조합이 적극 조직하자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18년 주요 뉴스

6~9면

처우개선 미미한
자회사 채용 추진
인천공항공사
(문재인 정부 관료)

2면

이상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

3면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
청와대 민간인 사찰,
나경원 등장,
선거제도 개혁 논란

4~5면

기간제교사노동조합 창립 1년
박혜성 위원장 인터뷰

11면

서울시,
여성 공무원 숙직 추진
성평등 아닌
여성 노동강도 강화일 뿐

10면

처우개선 미미한 자회사 채용 추진하는 인천공항공사(문재인 정부 관료)

양효영

1년 전, 인천공항 노사는 전체 파견·용역직 노동자 중 30퍼센트를 공사로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은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추후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공사는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청업체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들은 임시 자회사에 고용됐다. 그런데 임시 자회사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때와 같은 임금을 받으며 일했다. 심지어 임시 자회사가 공사가 준 인건비의 일부를 떼먹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공사는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 애초부터 공사 측이 자회사 전환을 통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지난 10월부터 11주 동안 사측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회피해 왔다. 그러더니 12월 26일, 기존 합의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은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발표를 강행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기존 합의에서 후퇴하는 것에 반발했는데도 말이다. 사측은 한국노총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를 압박·희유해 이번 합의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타 공공기관에 있어 모범이 될 만하다”며 자화자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이번 합의안은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내용을 보면, 사측은 2017년 5월



문재인의 비정규직 대책, 빛 좋은 개살구임이 드러나다

12일 이후 입사자들에게는 경쟁 채용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기존 합의에서는 이미 자회사 채용이 정해진 사람들이었다. 사측의 합의 파기로 무려 2000명의 자회사 전환 채용이 불확실하게 됐고, 일부는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자들이 격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사측은 이런 합의 파기가 올해 11월 정부가 내린 ‘공정 채용’ 지침 때문이라 말한다. 그러나 소위 ‘채용 비리’는 보수 언론들의 근거 없는 추측성 비난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근거도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일자리를 질 개선”을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또한 사측은 기존 합의문에서 자회사 2곳을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야합안’에선 3곳 이상으로 늘릴 수 있

는 여지를 남겨 놔다. 자회사 수가 많아질수록 노동자들은 서로 상이한 노동조건을 요구 받기 쉽고, 단결하기 어려워진다. 노동자들은 ‘여러 개로 쪼개진 자회사는 실상 과거 하청업체와 다르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쟁 채용

자회사 전환 대상자들의 임금과 처우 수준도 별 볼 일 없다. 사측의 주장으로만 봐도 임금이 고작 3.7퍼센트 오르는데 불과하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기본급은 179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2017년 기준). 수당 등을 합치면 총임금은 평균 276만 원가량 되지 만(한국 평균 283만 원), 노동시간은 국내 평균보다 11.7퍼센트 높다. 비정규직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안방재,

환경미화의 경우에는 임금이 낮은 최저직급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이처럼 저임금 상황에서 겨우 3.7퍼센트 인상하겠다는 건 제대로 처우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사측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 없이”(사측 보도자료)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기존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일 반관리비, 이윤 전액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쓰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돈 중 69억 원을 자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임금 인상이 미미해진 것이다.

또한 사측은 자회사 임금체제로 직 무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측

의 안은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정부의 표준임금모델과 다르지 않다. 동일 직무 내 승급은 평가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하고 임금 인상 상한선을 두어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평가를 발미로 사측의 통제력을 강화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자회사에 경영 목표를 부여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런 성과급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경쟁과 노동강도 강화 압력으로 작용하기 쉽다.

이처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바람을 짓밟는 안에 한국노총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가 합의해 준 것은 매우 문제다. 사측의 문제적인 안을 ‘노사합의’로 포장할 수 있게 들러리를 서 준 것이다.

인천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1호 사업장’으로 꼽힌 상징적 사업장이다. 그러나 문재인이 인천공항에 다녀간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는 정규직이 아니라 자회사를 강요하고, 자회사 전환자들의 임금·처우 또한 거의 개선하지 않아 도로 ‘파견·용역’이 돼 버린 것이다. 이번 야합 강행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의 파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합의안 발표 당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 500명은 공항 로비에 모여 ‘해고 위협, 졸속·일방강행으로 정규직 전환 역행하는 인천공항공사’를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기만적인 야합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사측은 즉각 ‘야합안’을 철회하라!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 — 투기 조장할 부동산 경기 부양책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키울 것

정선영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체의 중간 값이 8억 원이 넘었다. 임금이 전체의 중간인 노동자가 28년 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내놔다. 정부는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신도시에 교통망 확충이나 기업 유치 계획 등은 발표했지만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은 포함하지 않았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아니라 민간 건설사들이 비싸게 분양하는 방식으로는 노무현의 실패한 2기 신도시를 반복할 뿐이다. 그래서 발표된 지역들에서 벌써 집값이 들쭉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에서는 도심 유휴지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1만 9000호를 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필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규모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윤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압력에 타협하며 공공임대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해 왔다. 공급된 공공임대주택도 저소득층이 이용하기에 턱없이 비싼 것이 많았다.

이번에도 서울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규제를 완화해 수익을 확대시켜 주고, 이를 유인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비슷한 정책이었던 서울시 청년주택 정책은 턱없이 비싼 임대료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임이 드러났다. 이런 시장 타협적인 정책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 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다. 그런데 제대로 추진되려면 정부의 기본 방향과 상당한 충돌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치솟을 때 문재인 정부가 미흡한 대

책만 내놓다가 투기를 부추길 공급 확대 계획으로 돌아선 것은 최근 정부의 친기업 기조 강화와 관계 있다. 정부는 악화하는 경제 위기와 실업난 등을 해결하겠다고 친기업적 경제 성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2015, 2016, 2017년에 역대 최고 수주를 기록했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 수주가 감소해 내년에도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건설업 침체로 한국 경제 성장률은 0.4퍼센트 하락하고, 취업자 수는 9만여 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리 인상 압박

그래서 문재인은 신도시 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것 등을 통해 건설기업의 이윤을 떠받치려 한다.

이는 역대 정부들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도 집권 내내 신도시 추진, 골프장 건설, 건설규제 완화 등

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떠받쳤다(《참여정권, 건설족 뒤편에 걸리다》, 박태건).

그러나 건설 기업 지원은 일시적 효과만 났을 뿐이다. 이런 지원은 이윤을 저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에 일시적 진통제는 될지 몰라도 치료약이 될 수는 없다.

투기 부양 정책은 노동자·서민에게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10년 사이 2배로 늘었다. OECD 평균보다 무려 8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금까지 저금리를 이용해 막대한 가계부채가 지탱됐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에도 금리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자본이 유출됐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외국 자본이 주식시장에서 급격히 빠져나가며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지금 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신흥국들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한국은

행도 올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아직 큰 폭은 아니지만, 신흥국의 위기가 확산할 경우 금리 인상이 가팔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리가 인상되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가계가 늘면서 한국 경제는 더욱 불안정해 질 것이다. 이 과정이 빚에 짓눌려 사는 노동자·서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건설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투기 부양책은 중단해야 한다.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반지하·옥탑·고시원을 전전해야 하는 주거 빈곤층인 상황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이윤 논리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값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의 친기업 정책 때문에 막대한 빚을 떠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정책(부채 탕감 등)도 대폭 강화돼야 한다.

이상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

김용균 씨 사망은 한국 사회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국은 매해 2400여 명이 일하다 죽을 만큼 ‘산업재해 왕국’으로 악명이 높다. 그간 노동계를 필두로, 산재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 위험 업무의 외주화 금지,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랫동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권리 강화를 위해 활동해 온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왼쪽 아래 사진)에게서 산업재해의 원인과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노동자 투쟁과 작업장 안전의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이상윤 대표는 현재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의 산업재해 비율이 높은 데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안전 설비와 인력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는 않고, 이윤 활동에만 몰두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기업들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부족한데요,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안전 규제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법과 제도 자체가 ‘기업 봐주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동자들이 작업장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노조 결성 권리부터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이 매우 부족합니다.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문제를 알고 있더라도 개선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기업의 책임, 정부의 역할, 노동자의 권리 등을 제도화된 형태로 명문화하는 것이 법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1981년에야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 대폭 개정은 1990년에 있었습니다.

[산안법조차 없던 박정희 정권 시절에 대해] 건설 노동자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한국의 아파트나 고속도로 등은 건설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피와 희생으로 [만들어졌어요]. 흔히 옛날에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했던 것처럼, 한국의 아파트와 도로, 철도 등은 인골탑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로 죽어간 희생 속에 세워진 것들이죠.

유럽과 미국에선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노동자 안전과 건강 관련 제도나 법의 중요한 개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때 노동자들이 엄청난 투쟁을 했고, 그 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것이죠.

한국은 당시[1980년대 초와 말] 노동자들이 명시적으로 법제화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1980년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등이 당시 군사정권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위험의 외주화를 철회하라!” 고(故) 김용균 씨의 동료인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인골탑

그런데 [1990년] 이후 부분적 수정만 있었어요. 1990년 이후 벌써 28년이 지났는데, 그때 한국 산업사회의 여러 특성들이 지금과 맞지 않는데 제도는 옛날 그대로예요. 예컨대, 기존 산안법 자체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영한 조항 자체가 거의 없어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사고 등 사회적으로 아픈 참사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촛불 운동 덕에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대해 책임 지겠다는 말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경제 정책들은 규제 완화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오히려 자본들의 힘을 강화시켜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분열적인 모습이에요. [현재 정부

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원청]기업들이 외주화를 통해 이윤은 더 챙기면서 인건비와 관리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또 외주업체 노동자가 [하청이나 원청에] 안전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전혀 피드백도 없고 개선되지도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결론을 짓자면, 작업장과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한 사회의 경제 구조 내지는 경제 현상의 반영이자, 노동자와 자본 관계의 반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문제입니다. 즉,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는 근본적인 투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보고, 그나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지표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힘과 비례하는 것이므로, 노동자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한 투쟁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공분이 광범위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사회 운동 진영은 법안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계처럼 취급 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운동으로 더 키우고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토요일 범국민 추모제에 노동자들과 뜻을 가진 시민들이 많이 참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뷰·정리 신정환

서울시립대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항의 운동을 하다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내 또래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발전소에서 이런 죽음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부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주화에 맞서 싸워 왔다. 나는 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 제목은 ‘발전소 산재 사망자 추모 및 직접고용 쟁취 문화제’였다.

죽은 동료들을 추모하고, 노동자가 더는 죽지 않는 방법이 직접고용이라고 외치는 자리였다.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은 열악했다. 도저히 공공부문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노동자들은 빛을 생산하면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일했다. 시원한 바람을 생산하면서 가장 뜨거운 곳에서 일했다. 식사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너무 위험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작업 환경이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직접고용 쟁취하자” 구호를 들고 함께 외쳤다.

나는 죽지 않고 일하는 것이 왜 ‘요구’가 돼야 하는지, 이 사회에 분노했다.

넉 달 뒤 내 또래 청년 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들려 왔다. 내가 갔던 바로 그 발전소였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알게 됐고 집회도 몇 차례 열렸다.

넉 달 전과 똑같은

고 김용균 씨 추모 집회에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넉 달 전과 똑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여름에 외친 노동자들의 요구는 겨울이 돼도 바뀌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발전 노동자들의 외침을 무시한 결과다. 바로 그 때문에 김용균 님이 죽었다. 김용균 님을 ‘정부가 죽였다’는 유가족의 발언은 사실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더 노골적으로 친기업 정책으로 나아간다. 문재인은 기업의 결핍들을 정부가 적극 나서 해소해 주겠다고 했다. 김용균 님의 죽음이 안타깝다는 말은 입발림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다. 이런 정부에

기대를 걸어서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나와 서울시립대 노동자연대 회원들은 사건을 접하자마자 학교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립대분회 소속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함께 이 사건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급하게 연락했는데도 노동자 10여 명이 점심시간을 쪼개 모였다. 함께한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많이 분노했다.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팻말을 들고 외주화 중단과 진상규명을 외쳤다.

보수 언론들이 노동자와 학생을 이간질하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행동을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음을 새삼 알았다. 노동자들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구호를 외치며 연대감도 느꼈다.

열악한 일자리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사는 청년·학생과 노동자는 언제든지 김용균 님이 될 수 있다. 열악한 일자리를 개선하고, 죽음의 위험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더 나아가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와 학생은 연대해서 싸워야 한다.

양선경 서울시립대 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를 지지합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약칭: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2월 22일에 이어 29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2차 범국민 추모제를 진행한다. 집회가 끝나면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한다. 자식을 잃은 커다란 슬픔 속에서도 부모님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매일 아침 장례식장에서 용균이의 손 피켓을 든 사진 앞에 서서 용균이에게 약속한다”며 김용균 씨가 원했던 것(정규직 전환)을 꼭 이루기 위해 대책위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서울에서 추모제를 연다는 계획이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00여 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계속 늘고 있음).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조합, 진보·좌파 정치단체들, 시민·청년·학생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기본 입장은 5가지다.

1) 문재인 대통령 사과

2)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배상
3)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5) 현장시설 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
각 지역에서도 추모 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난 태안에선 매일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부산 등 10여 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매주 촛불 집회가 진행 중이다.

청년·학생들도 ‘청년추모행동’을 결성하고 12월 19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추모제 참가, 분향소 조문, 추모 활동을 위한 모금 동참 등을 호소하고 있다. 향후 서명도 받을 계획이다. 12월 29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차 범국민 추모제를 비롯해 이어지는 항의 운동에 적극 참가하자.

신정환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08-9726770 김동중(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보여 준다

김문성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가 민간인 사찰 문제로 번졌다.

한국당이 공개한 민간인 사찰 목록에는 홍익대 전성인 교수도 있다.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를 비판하는 지식인 선언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를 진보파라고 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특감반 상관인 조국 민정수석 경질로 문제를 몰아가고 있다. 12월 21일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건의 개요는 간단하다.

폭로자인 김태우는 검찰 수사관 출신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다. 그는 비위 혐의가 포착돼 적어도 두 차례 경고를 받았다. 김태우는 승진을 위해 특감반 권한을 이용하기도 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비위 혐의자가 돼 검찰로 복귀하게 되자, 우파 언론을 통해 우윤근 주러 대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했다.

조국 수석과 청와대는 김태우가 민간인 첩보를 수집하고 계속 보고하는 것에 대해 주의도 주고 첩보로 접수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개인이 독단으로 한 일탈인데 청와대가 공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청와대가 진작에 김태우를 정리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이다. 청와대의 해명은 김태우의 월권 조사

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편, 반부패비서관실은 구성부터 문제였다.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갑을오토크 사측을 변호했던 인물이다.

김태우가 속했던 특감반의 반장인 행정관 이인걸의 경력도 못지않다. 그도 공안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내곡동 사저 의혹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진보당 해산을 위한 TF에 참여했다. 검사 퇴직 후에는 김연장에 취직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옥시 사측을 대리했다.

전형적인 개혁 대상들이다. 청와대 감찰반 사건은 문재인 적폐 청산의 위선을 보여 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런 상징적 인사들만 구속되고, 검찰 수뇌부 정도가 교체됐을 뿐이다.

맞기만 하고 앞으로는 가기 힘든

문재인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위해서 조국을 민정수석에 임명한다고 했다. 최근 조국 수석은 이 임무를 상기하면서 “맞으면서 가겠다”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결연히 개혁의 사명을 내세우면서도 개혁의 대상들과 동행한 것은 이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보여 준다.

실제로 진척시킨 개혁도 없다. 사법 개혁 청사진은 희미해, 와닿지 않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물 건너간 듯하다.

김대중 정부 때 우파가 대북 화해 추진을 이유로 임동원 통일부장관 경질을 요구할 때는 진보진영이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다. 대북 적대주의를 지

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나 우리나라 뭐가 다르냐’는 우파의 공세에 자유주의자들의 처지가 군색하다. 문재인인의 ‘개혁’으로는 우파의 회복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새삼 보여 주는 사례다.

이는 개혁 지체에 대한 항의에 직면했을 때 중도 ‘개혁’ 정부들이 흔히 하는 변명을 떠올리게 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모두 그랬다.

개혁의 대상이 기존의 존재조건 그대로 개혁의 주체로 변신할 수는 없다. 국가기관이든, 적폐 인사들이든 말이다.

고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이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물을 국회에 불러서 호통치고, 두 사람이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을 연출해 우파 사기 진작에 써먹으려는 것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조국의 운영위 출석과 12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심사를 연계시켰다. 부족한 정부안조차 통과시키길 거부하는 것이다.

산안법 전면 개정 압력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의 효과이고, 이 운동은 문재인인의 우경화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발미 삼은 우파의 공세는 왼쪽의 저항



문재인 식 개혁은 우파의 기반 살려주고 있다

이 갖는 효과를 반감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운동 안에서 문재인인의 책임을 묻기를 자제하는 자기 제한적 경향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청와대는 검찰의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수용했다. 사기를 회복하기 시작한 우파가 대북 화해나 적폐 청산 같은 걸 즐겨 말했던 인사들을 계속 표적 삼으려 할 것이다.

우파는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대북 화해주의는 위험한 도박이고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인의 검찰·사법 개혁은 박근혜·이명박을 구속하는 정치 보복이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추락해 부정평가 50퍼센트를 넘는다(데크로스)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렇수록 그는 측

근들에게 더 의존하려 할 것이다. 인사 문제에서 여야 갈등은 계속될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이 정권 방어용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유시민은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강변한다.(홍준표의 유튜브 방송은 정치 활동 재개로 보면서 유시민만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 유시민은 신자유주의에 매우 친화적인 입장을 보였던 친노 인사의 하나다. 그의 방송에는 우파뿐 아니라 좌파 공격도 포함될 것이다.

문재인인의 중도 정부가 본격적으로 협공받기 시작했다. 노동운동은 진정한 좌파 포지션에서, 여야 모두에게서 독립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의 배신에 항의하는 진짜로 진보적인(좌파적인)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원내 5당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임시국회에서 다시 가동됐다.

그러나 합의가 워낙 모호하고 거대 양당의 공생적 이해관계, 의원들의 기득권 등이 걸려 있어서 내용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처럼 정당비례투표와 지역구 투표를 하지만, 정당득표를 먼저 의석 배분에 계산하는 것이다. 가령 정당 득표율이 30퍼센트이고 지역구 당선자가 40명이면, 50명을 비례 의원으로 채우는 것이다(현행 300석의 30퍼센트는 90명).

전국적 정당 지지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경우에는 당선자를 당선 무효시킬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 총정

원수를 초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그래서 국회 의석의 정원이 총선 때마다 바뀔 수 있다.)

정당비례를 강화하고 봉쇄조항*을 폐지하라는 것이 민주노총과 진보·좌파들의 요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정 정도 득표율을 받으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출에 유리하다.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이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수당 체제의 내각제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래서

용어설명

봉쇄조항

지지율이 일정 비율이 넘어야 비례의석의 배분 대상으로 삼는 것. 현재 한국은 전국 득표 3퍼센트다. 연동형비례대표제 하에서는 국회 의석 1석이 0.34퍼센트에 해당하므로 이 봉쇄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려면 내각제 개헌 논의와 연동하자고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차단하겠다는 심산이다.

사실 이제도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에 유리하다고 해도 그뿐이지 거대 양당의 주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아니다. 현실에선 대부분의 나라가 선거제 도나 대통령제, 내각제 등에 상관없이 양당 체제이다(경제 위기와 정치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서구에서는 이 중도 정치세력들이 무너지고 있지만).

그러므로 선거제도 개혁이 의회 협상으로 가능할지는 역설이게도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우선 달려 있다.

그러나 총선 전에 우파 결집을 위해 바른미래당을 통합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이나, 역시 중도보수를 붙잡는 수단으로 바른미래당 일부를 흡수하고 싶어 할 민주당이 다 소수와 정당들에게 할로를 줄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리 없다.

내후년 총선에서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지역구 축소나 정당 공천권이 강화되는 것에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민주당도 자신들의 비례 몫을 뒤편하러 소수 정당들에 나눠 주겠는가.

물론 문재인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소수 정당 달래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진보 정당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할 것이다.

대안

박근혜를 사퇴시킨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 이후 개혁 염원과 반우파 정서가 크게 고양됐다.

진보 정당 지지도 늘었다. 특히 정의당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노동계 진보 정당 최초로 대선에서 200만 표를 얻었다. 지방선거에서도 지지가 크게 확대됐다. 여론조사 지표도 좋다.

그러나 그동안 정의당은 물론이고

민중당, 노동당 등은 지지율에 견줘 의석수가 적었다. 군사정권과 그 계승정당들이 이간시켜 각개격파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바람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가 되면서 진보 정당들이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를 얻고도 의원들을 내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이나 한국당 등은 전국적 지지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고 공식 정치를 양분해 지배하고 있다. 기존 선거제도로 인한 사표 비율이 21.9퍼센트나 된다고 한다.

그래서 진보 정당들은 한목소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다. 3퍼센트 봉쇄 조항도 없애야 한다.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현재의 지지율만으로도 정의당은 국회 교섭단체(의원 20인 이상)가 될 수 있다. 민중당, 노동당도 의석수가 늘거나 의원이 생길 수 있다.

▶ 5면으로 이어짐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나경원은 누구인가?

사학 재벌가 출신의
우파 기회주의자

김문성

나경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된 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파적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업계 집회에 참석해 정부를 비난했다. 조국 민정수석 경질 압박에 앞장서고 있다. 12월 26일 남북철도 착공식에도 고의로 불참했다.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유치원 3법” 등의 통과를 막고 있다.

배신과 위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휘청거리자 대여 공세로 보수를 결집시키겠다는 것이 나경원의 계산이다. 그가 원내대표가 된 것도 보수대통합을 기치로 친박계의 지지를 받은 덕분이었다.

불과 2년 전 나경원이 박근혜 탄핵 투표에 적극 참가한 것을 떠올리면 놀라운 변신이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은 서울에서 화곡중 · 화곡고 · 화곡여상 등을 운영하는 흥신학원 이사장(소유주)의 딸이다.

사학 재벌가 출신인 그가 우파에서 주목을 받은 것도 2004년 사립학교법 개혁에 적극 반대하면서였다. 당시 그는 비례 초선의원이었다.

그는 교사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천박한 인식을 드러냈다. 2008년 한 지방 여성지도자협의회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1등 신붓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은 못생긴 여자 선생님, 3등은 이혼한 여자 선생님, 4등은 애 딸린 여자 선생님.”

민주적 개혁의 표상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음은 물론이고, 한국에

서 열린 일본 제국주의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에도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친이계와 잘 지내면서 당 최고위원, 서울시장 후보 등을 지냈다. 그러다가 이명박이 부패 문제로 휘청거리자, 그의 봄날도 가는 듯했다.

2011년 흥신학원 이사장이 2004년 소속학교 교사들에게 나경원 정치후원금을 걷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사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걷은 것은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다. 게다가 한국은 역사 이래 교사의 정치 후원을 허용한 적이 없다. 월 1만 원 민주노동당에 후원한 것 때문에 법적 고초를 겪은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들을 들 수 있다.

명색이 판사 출신이고, 그 남편도 판사인 나경원은 2011년 말도 안되는 해명을 내놓았다. “2004년 당시에는 공무원들도 선거 정치자금을 내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었다.”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 속에서 2012년 총선의 공천권을 박근혜가 쥐자, 나경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어차피 공천받지 못할 거라고 본 것이다. 나경원은 2014년 보궐선거로 다시 의원이 되고 나서는 친박계에게 고분고분했다. 두각을 나타낼 기회는 없었지만 당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차츰 입지를 굳혔다.

그러다가 거대한 정권 퇴진 촛불에 직면하자 이번에는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그레놓고 정작 탈당은 안 했다.

탈당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나

경원은 강성 친박계가 말하는 배신자 목록(“김무성, 유승민, 김성태”)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본인은 절대 그를 용서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최근 한국당의 지지율은 조금 오른 반면, 문재인 지지 하락 속도가 빠른 게 나경원과 한국당에게는 기분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만큼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건 아니다. 특히, 친박이 직접 나서기는 아직 이르다.

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얻어 상황이 조금 나아지자 나경원은 아직 친박계가 전면에서 나서기 어려운 조건을 이용해 그들과 동맹을 맺는 책략을 부렸다. 딱 한국당에 어울리는 정치인이다.

한편, 박근혜 정권을 중도 퇴진시켜 버린 촛불 운동은 강력한 반우파 정서였는데도 2년이 흐른 뒤, 몰락할 것으로 보이는 정당이 한국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인 것은 한국 정치가 매우 양극화돼 있음을 보여 준다. 바른미래당처럼 온건 우파로 처신하면 국물도 없는 것이다.

문재인과 같은 중도 세력은 우파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또한 확인되고 있다.

좌파가 문재인을 반대해서 우파가 강화되는 게 아니다. 문재인의 우경화가 우파에게 반사 이익을 주고 온건 진보 세력에게 찢쩍대는 조건을 안겨 주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의 위선과 배신에 침묵할수록 우파에게 유리해진다. 좌파가 대중의 실망과 분노를 대변하며 단호하게 운동을 선도해야 기회가 생긴다.



사진 출처: 정은영

진보·좌파 정당들이 문재인 왼쪽의 지지를 획득하려면 기층 투쟁을 성장시켜야 한다

과 우경화에 맞서 싸우는 것을 다소 왜곡시키는 요인이다.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문재인 지지하기에 머물면서 일부는 개혁 투쟁이 약해지거나, 일부는 환멸스러워 탈정치화돼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파는 잘 결집하기만 해도 선거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반우파 · 비민주 성향의 진보 염원 대중에게는 진보 · 좌파적인 선거 대안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자동으로 사람들이 진

보 · 좌파를 정치적 대안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다. 고(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투쟁 등을 대규모로 성장시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진보화시켜야 한다.

혁명가들은 진보 · 좌파 정당들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들을 지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2020년 총선에서 진보 · 좌파 정당들이 약진하길 바라야 한다.(어쩌면 그전초가 내년 초故 노회찬 의원의 유고로 열리는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가 될 수도 있다.)

김문성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김승주

11월 22일 문재인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열린 산재노동자 한마당에 축사를 보냈다. “[정부는] 출범 전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 파견이나 용역, 특수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하기 고작 한 달 전이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7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0명 증가해 총 1957명에 달했다. 2018년 9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76명이 늘었다.

안전보건공단 웹사이트의 산재 통계 최신 페이지만 봐도 얼마나 많은 “김용균들”이 잊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쏟아진 적재물에 깔림”, “발판 설치 작업 중 떨어짐”, “컨베이어 이물질 제거 중 기동 사이에 끼임” ...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대사고 기업처벌법 제정은 온데간데 없고, 법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은 대공장 정규직 노조원조차 쉽게 사용하지 못한다.

2018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다.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당시는 사망자 29명과 부상자 수십 명을 낳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직후였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악몽은 반복됐다.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망자 39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무려 190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큰 사고가 날 때마다 ‘국가 안전 대진단’을 시행하겠다고 떠들썩하게 내세웠다. 이것이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연이은 사고로 드러났다.

두 화재 사고 모두 피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은 쉽게 타는 값싼 건물 외장재였다.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은 것, 소화기가 없거나 충전되지 않은 것 등도 마찬가지였다. 130명의 사상자를 낳은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나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 사고 때도 똑같은 원인이 지목됐었다.

소방 인력에 대한 투자 부족과 안전 규제 문제도 크게 불거졌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에서 가장 많이 배정된 곳은 소방 · 구조 인력이 아니라 경찰이었다. 소방 인력 확충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말이다.

올해 11월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한 달 뒤에

는 막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두 사고 모두 필요한 안전 규제가 없거나 있어도 안 지켜진 게 원인이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6 · 13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외쳤기 때문이다.

누구의 안전이나

이런 일은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일어났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규제총량제’와 ‘규제일몰제’를 도입했다. 이 중에는 소방법, 건축법, 청소년기본법이 포함돼 있었다. 이것이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 23명이 사망한 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의 배경이었다.

2003년 2월에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로 192명이 죽고 151명이 다쳤다. 세계적으로 지하철이 생긴 이래 두 번째로 큰 인명 피해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철도 민영화로 나아가려고 철도에 수익성 중심의 운영 체계를 도입하고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바꾸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린 가슴기 살균제들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고 출시된 시기도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때였다. 2018년 1월 가해 기업인 옥시의 대표 존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자본가들은 무한 이윤 경쟁을 한다. 그들에게 비용 절감은 지상 명령이 되고 안전을 위한 규제는 이윤 활동의 걸림돌일 뿐이다. 노동자의 안전과 상품을 사용하는 대중의 안전은 쉽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정부가 이런 자본가들을 억제할 수 있을까? 일시적 · 예외적으로라면 모를까, 근본에서는 그럴 수 없다. 자본가 계급의 착취와 자본 축적이 성공하지 못하면 국가(따라서 정부)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애당초 문재인 정부는 그런 억제를 시도할 생각도 없다.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직후 보란 듯이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제주 영리병원을 사실상 허가해 준 것을 보라.

문재인의 온화한 듯한 태도 이면에 있는 진정한 기반을 봐야 한다. 민주당은 (이 나라 지배계급의 제2선호 정당이긴 해도)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자본가 계급에 기반한 친자본주의 정당이다. 단지 우파들의 공격에 떠밀려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

위험에 내몰린 대중의 안전이나, 아니면 경제 위기에 아우성치는 사장들의 이윤 ‘안전’이나. 안전 문제는 이처럼 계급 문제일 수밖에 없다.

아래로부터 대중 투쟁에서 진정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2018년을 돌아본다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세계경제

여전한 세계경제 불안정성:
터키 화폐 폭락 등 신흥국 위기

8월 터키 화폐 리라화의 가치가 1주일 만에 5분의 1이 하락했다. 연초에 견줘 거의 반토막이 난 것이다. 같은 주, 남아공·인도·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통화의 가치도 떨어졌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진 빛의 부담이 늘어나 외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 물가가 급등했다. 보수언론들은 정치권의 인기 영향 주의적 복지 남발을 원인으로 지목한

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우파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크리는 전임 대통령들의 온건한 케인스주의 정책을 뒤집어 정설 신자유주의로 회귀했다고 크게 칭송받고 있었는데, 다른 신흥국들과 마찬가지로 통화 가치가 폭락했다. 신흥국들의 위기는 세계경제가 아직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음을 반영한다. 그리고 또 다른 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긴축에 맞선 아르헨티나 노동자 투쟁

사진 출처 아르헨티나노동조합연맹(CGT)

한국 경제

한국 경제 위기 심화와
우경화하는 문재인

올 들어 미·중 무역 갈등 심화, 한국의 투자 감소, 조선업·한국GM 등의 구조조정 등으로 한국 경제가 불안정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급격하게 우경화했다. 최저임금법 개악, 말잔치로 끝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근로기준법 개악, 의료 영리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등. 그리고 최근에는 탄

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의 더한층 개악 등을 추진 중이다. 대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뒤에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이미 실현해 오던 정부의 우경화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가 분명해질수록 이에 실망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부동산 가격 인상과
가계부채 증가

문재인 정부는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올 들어 집값은 계속 올랐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고통은 심화했다. 가계부채 상승세도 여전히 높아 최근에는 1500조 원을 넘어섰다.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민자 사업, 제3기 신도시 건설 추진 등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부양은 또다시 가계부채 등을 늘려 한국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한반도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긴장 완화

한반도는 트럼프 집권 이후 2017년 내내 긴장이 높아져 왔다. 그러나 2018년 들어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뀌었다. 남·북·북·미 정상들이 잇달아 만났고, 긴장은 누그러졌다. 그러나 정상회담들에서 나온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게 별로 없다. 트럼프 정부는 제재를 유지한 채 북한의 선 비핵화만을 압박하고 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 북·미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

냈다. 앞으로 한동안 협상이 가다 서다를 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무역전쟁을 비롯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악화한다는 점이 한반도 평화 협상의 전망을 근본에서 불확실하게 만드는 변수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의 중재자를 자임하지만, 결국 제국주의에 일관되게 저항할 세력이 아니다. 11월에 트럼프를 만난 문재인이 미국의 대북 제재 유지 기조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STRATIS TIMES

국제 정세

무역전쟁 본격화와 악화하는
제국주의 간 갈등

트럼프가 공언한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의 수출품에 관세를 연달아 부과했다. 무역전쟁은 단순히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이를 통해 미국의 주요 경쟁국들한테 미국의 패권 아래에 굴복하라고 강요하고자 한다. 즉, 결국 무역전쟁은 제국주의 간 경쟁의 일부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타깃은 중국이다. 중국의 부상은 오늘날 미국의 세계 패권에 가해진 가장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군사력 증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국의 첨단 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국제정세가 더한층 불안정해짐을 예고한다. 무역전쟁과 맞물려 지정학적 경쟁도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이란 핵협정 파기하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전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맺은 이란 핵협정을 파기했다. 이어서 11월에는 대이란 경제 제재를 부활시켰다. 이는 중동 정세를 더 혼돈에 빠뜨리고, 이란을 비롯한 중동 민중에게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 협조 압력에 타협했다.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얽히고설켜 있고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존중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일이다. 북한 권력층은 이란 핵협정이 손쉽게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된 상황을 눈여겨 볼 것이다. 미국과의 거래는 언제든 파기될 수 있고 제재가 다시 작동할 수 있다는 점 말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타협은 중동 평화에도, 한반도 평화에도 나쁜 선택이다.

중앙아메리카를 종단해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민 행렬

10월에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이주민 행렬이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거쳐 수십 일 만에 미국-멕시코 국경에 도착했다. 이들은 온두라스의 폭력과 가난을 피해 도망쳤다. 온두라스에 만연한 폭력과 가난은 미국 제국주의의 범죄적 행위와 연관 있다. 미국의 묵인 하에 쿠데타로 집권한 온두라스 정부가 잔혹한 정책을 펴 평범한 사람들은 안전과 생계, 미래를 잃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국경으로 군대를 파견했다. 이주민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는 이주민 행렬을 핑계 삼아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중도파 위기와 극우의 부상,
이에 맞선 반(反)극우 운동

유럽 곳곳에서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중도우파·중도좌파의 득표가 줄고 있다. 가히 '몰락'이라 할 만하다. 중도파의 몰락은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경계 위기가 10년 이상 이어지는 지금도 고집하는 게 핵심 요인이다. 이제 중도파의 주장은 대중을 설득하지 못한다. 이탈리아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헤게모니의 위기' 상황인 것이다.

그 수혜는 주로 극우가 입고 있다. 올해에는 3월 이탈리아 총선에서 우파적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이 1위를 차지하고 극우 정당인 '동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4월 헝가리 총선에서는 노골적 나치 정당이 오비당당이 2위를 차지해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9월 스웨덴 총선에서는 나치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이 17.6퍼센트를 득표해 제3당이 됐다. 위기에 빠진 중도파가 인종차별

한 정책을 펴 평범한 사람들은 안전과 생계, 미래를 잃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국경으로 군대를 파견했다. 이주민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는 이주민 행렬을 핑계 삼아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경제 난민 230만 명, 물가 인상 100만 퍼센트 ... 파국의 베네수엘라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2014년부터 5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난민이 전체 인구의 7퍼센트 정도인 약 230만 명이라고 밝혔다. 2014년 국제 유가 폭락의 여파로 1인당 실질 소득이 40퍼센트 줄고 생필품 공급량이 80.9퍼센트 감소하는 등 만성적 경제 위기를 겪은 것과, 정치·사회 불안이 심각해 대규모 소요와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의 영향이

다. 베네수엘라 우파와 미국은 이 위기를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 몰결의 핵심 고리를 파괴할 기회로 봤다. 이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역사의 시계를우고 차베스가 집권한 1999년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주의의 실패' 운치·사회 불안이 심각해 대규모 소요와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의 영향이

방한 '볼리바르식 혁명'의 실패는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도전 없이 위로부터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개혁주의 전략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사회주의는 위로부터 건설될 수 없다. 아래로부터 건설돼야 한다. 좌파는 베네수엘라의 파국에서 교훈을 얻어 혁명적으로 좌선회해야 한다.

브라질 대선, 극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 당선

10월 28일 브라질 대선에서 극우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당선됐다. 인구가 2억 1000만 명이고 경제 규모가 세계 8위인 국가에서 군부 독재를 공공연히 옹호한 극우가 집권한 것은 노동자들과 모든 천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 징후다. 보우소나루 당선의 큰 책임은 사회민주주의 정당 노동자당(PT)에 있다. 노동자당이 집권 13년 동안 노동자 서민들을 거듭 배신하고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서민들에 전가한 탓

에 우파가 반사 이익을 얻었다. 보우소나루는 노동계급을 거세게 공격하고, 천대와 혐오를 부추겨 파시즘이 성장할 토양을 제공한 것이다. 노동운동·사회운동의 대중 저항이 브라질에서 즉각 건설돼야 하는 이유다.

반(反)트럼프 정서 속에 '민주사회주의'가 부상한 미국 중간선거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의 인종차별 선행 등에 힘입어 우파 유권자를 결집하려 했으나, 민주당보다 적게 득표해 8년 만에 하원 소수당이 됐다.(비민주적 선거제도 때문에 상원 다수당 자리는 유지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민·복지·차별·전정 문제 등에서 대중의 바람을 대변하지 않았지만 반(反)트럼프 표

심 덕에 하원 다수당이 됐다. 그보다 주목할 일은 미국민주사회주의당(DSA) 활동가들을 비롯해 '민주적 사회주의' 후보들(민주당 후보로 출마)이 70퍼센트가 넘는 높은 지지로 당선한 것이다. 이들의 선전은, 수십 년간 불평등이 증대해 온 미국에서 사회주의적 대안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반영이다. '잠거하라' 운동 이후 퍼진 저항 정서가 올해도 차별에 맞

선 대규모 거리 시위로 분출하고, 미국 교사들이 직종을 뛰어넘는 현장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며 곳곳에서 전투적으로 파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기성 정치에서 (국가를 이용해 친서민 개혁을 제공하겠다는 정치라도) '사회주의'가 부상한 것은, 점차 대중적인 반자본주의적 대안이 미국에서 건설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11월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11월 18일부터 '노란 조끼' 운동이 분출해 수십만 명이 강경한 시위를 벌였다. 직접적 계기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옥죄는 유류세 대폭 인상이었지만, 그동안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었을 입됐다. 이미 마크롱 집권 직후 프랑스 공공

부문 노동자 100만 명이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임시직과 파견업 비중·성과급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고, 철도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 받았다. 이 투쟁들은 승리하지 못했지만 마크롱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노란 조끼 운동에 대통령 마크롱이

한국 공식 정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김동원) 수사 과정에서, 현 여권도 대선 전부터 친문재인 여론 공작을 온라인에서 벌여 왔음이 드러났다.

김경수(현 경남도지사) 이 그룹과 민주당·친문의 연결고리 구실을 했다.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이재명 흡집내기를 지시한 문자도 나왔다.

특검까지 꾸러졌지만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 12월 26일 재판에서 특검은 드루킹에게 댓글 공작, 뇌물 등의 혐의로 7년을 구형했다.

여론 조작을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못지 않은 민주당의 여론 공작은 그 둘이 다를 바 없는 지배계급의 정당임을 보여 준다.



사법 농단 폭로

사법부가 신뢰를 받는 것은 국가가 중립이라는 생각이 강화되고 법치주의를 일상화한다는 뜻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더욱 자리잡는 것을 뜻한다.

올해 드러난 대법원의 재판 거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계급적 성격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거래 대상은 대부분 부당하고 등에 저רח한 노동자, 세월호 유가족, 독재정권 하 고문 피해자, 일제 위안부나 강제징용

자 등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이었다. 법원이 민간인 사찰까지 했다. 최근 법원은 수사를 위한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등을 구속하고 박근혜를 파면하면서 올라간 사법부 신뢰는 추락했다. 계급적 이익 앞에 3권 분립은 허상이었고 국가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

군부와 기무사의 촛불 무력 진압 논의

여러 폭로와 문건,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군부 내에서는 촛불 운동 초반부터 군대가 출동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있었지만, 촛불 운동이 워낙 크고 기세가 높아서 출동 기회를 못 잡고 포기한 듯하다. 모의의 중심에는 기무사령부가 있었다. 1979년 쿠데타를 일으킬 때, 전두환의 직책이 보안사령관이었다. 하나회는 김영삼 때 공식 해체됐

지만, 비공식 형태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 운동으로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좀더 자리잡게 됐지만, 그것이 대단히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음을 보여 줬다. 촛불 운동 당시에 무력 진압이 시도됐다면 혁명적 상황이 됐을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에서도 혁명은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사건인 것이다.

산업과 노동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기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노동을 불안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말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정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꿔놓을 사건일까? 〈노동자 연대〉기획연재 기사는 이런 물음들에 길잡이가 돼 줄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문재인은 당선하자마자 인천공항을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 사기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자회사 채용이나 표준 임금체계 도입과 같은 ‘돈 안 드는 개혁’을 추진한 탓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불거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계속 항의 투쟁을 벌였고, 올해 6월 30일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확연히 드러났다.

조선업 구조조정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노동 존중’을 표방했지만, 경제 불황이 지속되자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사용자 편들기를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선업 구조조정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보호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묵살하면서도, GM

의 자금 지원 요청이나 대형 조선소 사측을 지원하는 정책은 계속 내놔다. 세계 각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자 맞춤형 국가 개입’만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임금 삭감, 노동조건 악화, 비정규직 해고 등에 시달려 온 조선업·한국GM 노동자들은 또다시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쫓겼다.

광주형 일자리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꼽는 대표적 사례는 광주형 일자리다. 광주형 일자리 계획은 ‘반값 임금’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는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해 설계됐고, 임금 하향 평준화를 노리고 있다. 노동운동이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야 하는 까닭이다.

사측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서 물러서지 않아 일단 연기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9년에도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우경화와 당내 좌파 죽이기

문재인 정부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덕도 봤지만, 우파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유권자들이 힘을 모아 준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초부터 경제 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문재인 정부는 우경화하기 시작했다. 박근혜의 임금 삭감, 의료 영리화, 민영화 정책 등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진보 개혁을 염원하고 지지한 층을 속이고 배신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망신 주고 제거하려 한 것이나, 노동계약 반대 집회에 갔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괴롭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당 안팎에서 좌파의 성장을 막으면 반우파 정서에 기대어 재집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는 아직 노동운동의 쟁점이다.

투쟁에 나선 간호사들

2018년에는 여러 병원들에서 간호사들의 투쟁이 두드러졌다. 성심병원, 대구가톨릭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가천대길병원 등등.

정부가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면서도, 이를 노동강도 강화와 저임금 일자리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부문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공간이 크고, 노동운동 전체에 활력을 줄 듯하다.

사회적 대화/경사노위 논란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 행보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노조 지도자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 한다.

계급 협조주의를 부추겨 노동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약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우향우와 그 본질을 폭로하고 그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자고 독려하는데 힘을 쏟기보다는 경사노위 참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사노위 바깥에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싸운다면, 촛불 염원을 개무시하고 보라는 듯이 우경화하는 문재인 정부를 한 발 물러서게 만들 수 있다.



전교조

여성

올해는 여성 차별에 항의하며 성평등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이 말뿐이라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졌다. 낙태 단속·처벌 강화 시도가 한 사례다. 최저임금제 개악, 규제 완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노동

개악도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킨다.

국제적으로는 몇몇 나라에서 낙태권 운동이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좌파가 주도적 구실을 하며 노동계급과 평범한 여성들이 대거 참가한 대중 운동이 일어난 나라들이었다.

불법촬영 항의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나다

올해 일어난 여성운동 중 가장 두드러진 운동은 ‘불법촬영’ 항의운동이었다.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5월부터 12월까지 벌어진 이 운동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성운동이었다. 여섯 차례 시위에 연인원 총 30여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학생과 젊은 노동계급 여성들이 주로 참가했다.

활력과 투지가 돋보인 이 운동은 불

법촬영물 제작·유통에 미온적 태도를 취해 온 사법부·행정부·입법부 등 국가기관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페미니즘에 정면으로 항의했다. 이 운동은 일부 성과를 냈다. 올해 마지막 열린 6차 시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결집해 웹하드 카르텔 “공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여전한 투지와 자신감을 보여 줬다.

사회적 반향 일으킨 ‘미투’ 열풍

올해 1월 서지현 검사의 고발을 계기로, 각계에서 미투 열풍이 불었다. 특히 권력자들에 의한 성적 비행이 여러 건 폭로돼,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다. 민주당 권력자들도 이 문제에서 다르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보수적 잣대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자, 2만 명 규모의 항의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컸다. 올해 초 결성된 ‘미투시민행동’은 여섯 차례 거리 집회를 개최했고, 청소년들의 스쿨 미투도 있었다.

폴란드와 아일랜드에서 낙태권 운동 승리

3월 23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만 5만 5000명이 모여서, 낙태를 거의 모두 금지하려는 우파 정부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신생 좌파 정당 라젠크(함께라는 뜻)이 중요한 구실을 한 이 운동에는 학생과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들이 대거 참가했다.

5월 25일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그 결과, 압도적 찬성으

로 낙태를 일절 금지한 헌법 조항이 삭제됐다.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이 중요했다. 그 전 수십 년 동안 낙태권 운동의 등뼈로서 활동해 오고 국민투표 기간에 전국에서 대규모 낙태권 옹호 유세단을 조직한 사회주의 좌파의 구실이 컸다. ‘이윤보다 인간을’ 소속의 좌파 의원들은 대중적 낙태권 운동 건설에 큰 공헌을 했다.

교육

문재인은 자신의 교육 공약을 저버리며 개혁 염원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교육 개혁 열망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

문재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오른쪽의 압력에 타협하며 결국 수능을 강화한다는 공약과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특목고·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수능 강화 방침에 따라 특목고·자사고로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은 더욱 커졌다.

실패한 대입제도 개편은 공론화 과정이 비민주적 공약 파기로 이어진 또 하나의 사례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

문재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공약했다. 이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 ILO 등도 이를 솔하게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ILO 핵심협약이 비준돼야 한 다며 국회로 공을 떠넘기고 있다. 게

다가 정부측 공익위원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 내용도 노조인정 권리는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알맹이 빠진 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투쟁을 고무할만한 개혁 조치를 매우 꺼린다는 것과 노동자들의 독립적 투쟁이 중요함을 보여 준다.

재난

2018년은 시작부터 대형 참사였다. 1월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사망자 39명 포함, 사상자가 무려 190명에 이르렀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한 달 남짓 지났을 때다.

이후에도 고양저유소 폭발 사고, KT 아현국사 화재 사고, 강릉 KTX 탈선 사고 등 아찔한 사고들이 이어졌다. 11월에는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12월에는



백석 온수관 파열 사고

수능 시험을 막 마친 고등학생들이 가스 누출 사고로 사망했다.

산업 현장에서도 사고는 계속됐다.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했다.

2022년까지 정부가 절반으로 줄

이겠다면 산업재해는 증가 추세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산재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퍼센트 증가해 1588명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의 관심사가 대중의 안전이 아닌 기업주들의 이윤 벌이를 지키는 데 있었던 게 분명하다.

환경

사상 최악의 폭염과 혹한, 동남아시아 쓰나미 등

2018년에는 한국의 1월 말 최저기온 영하 27.3도(경기 연천)에 이어 8월 1일 최고기온 42.1도(경기 광주) 등 극단적인 날씨가 이어졌다. 1월 24일까지 한랭질환자 수는 339명(사망자 8명), 8월 15일까지 온열질환자 수는 4301명(사망자 48명)으로 그 직접적 피해가 크게 늘었다.

해수면이 높아져 동남아시아에는 쓰나미(지진해일)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런 급격한 날씨 변화가 기후변화의 효과라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이런 변화가 더욱 큰 규모로 자주 찾아올 것이라는 데에도 거의 이견이 없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온실가스인데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국내외 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된 지 오래다.

자본주의 이윤 논리 때문에 세계

최대 기업들의 무책임한 화석연료 생산·소비가 통제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미래를 건 도박의 판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

그러나 시리아 위기는 계속된다

12월 19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시리아 안에는 미군 2000명이 주둔해 있다.

미국 기성 권력층 다수가 철군 선언에 격분했다. 철군이 미국의 적, 즉 러시아·이란에게만 득이 될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트럼프를 후원해 온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같은 자도 트럼프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국방장관 매티스의 사퇴는 트럼프의 철군 선언을 놓고 미국 권력층 내 갈등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 준다. 매티스는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던졌다.

그동안 주류 언론들은 매티스가 행정부에 남은 “마지막 어른”이라고 했다. “어른”은 트럼프가 미국의 전통적 대외정책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균형’을 잡는 베테랑 관료·정치인을 가리킨다.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시리아 철군을 선언한 데는 국내 정치적 동기가 있는 듯하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다수가 이길 수 없는 중동 전쟁에 계속 군대를 보내는 데 염증을 느낀다. ‘러시아 게이트’ 특검, 민주당의 하원 장악 등 여러 악재를 뚫고 재선 가도를 달리려면, 트럼프는 지지층 결집을 유지할 한 방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동기는 미국 제국주의의 힘의 한계에 관한 현실적 계산이다. 이



미 국방장관 매티스의 사퇴는 시리아 철군 선언을 둘러싼 미국 지배자들 내의 갈등이 만만찮음을 보여 준다

라크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전임 오바마 정부는 중동 전선에서 군사적으로 전면 개입하기를 꺼렸다. 대신에 무인 폭격기를 주로 동원했다. 오바마 정부는 중동에 초집중된 역량을 돌려 중국을 상대하는 데 쓰고 싶어 했다.

트럼프도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미 올봄에 그는 시리아에서 조만간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명 투입 같은 소규모 개입으로 승

리할 수도, 그렇다고 전면 개입하기도 어려운 전장에서 아예 빠져 나오겠다는 얘기였다.

모순

그러나 중동에서의 곤경 때문에 전전긍긍해 온 미국의 처지가 시리아 철군으로 달라질 것 같진 않다. 게다가 트럼프의 중동 정책에는 모순도 크다. 미군이 진짜 시리아에서 완전 철수

한다면, 그 공백은 러시아·이란·터키·이스라엘 같은 경쟁 제국주의 국가와 지역 강대국들이 메우려 할 것이다. 특히, 이라크·시리아에서 이란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은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권력층이 절대 원하지 않는 일이다.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에서 이란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트럼프는 이란 핵협정을 파기했다. 이란을

견제하고자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이 정적인 카슈끄지 살해를 지시한 게 명백한 데도, 트럼프는 그를 두둔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이란을 제압하고자 미국이 화끈하게 개입해 주길 원한다.

이런 점들은 트럼프의 공언과 달리 미국이 시리아 문제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시리아 개입을 꺼리던 오바마도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가 부상하자 2015년에 이라크와 시리아로 병력을 보내야 했다.

트럼프도 봄에 철군 얘기를 꺼냈다가 4월에 시리아를 폭격했고, 지금까지 철군 결정을 미뤘다. 이번에도 트럼프 정부가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 철군 선언 와중에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시리아를 폭격했다. 그리고 그즈음에 미국 항공모함이 9개월 만에 이란 코앞에 배치됐다.

트럼프의 돌발 선언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열강과 지역 강대국들의 경쟁 때문에 시리아 위기와 중동의 혼란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고향을 떠나야 하는 난민도 계속 생길 것이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는 또 다른 위험한 도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김영익

서울시의 여성 공무원 숙직 방침에 반대해야 한다

성평등 아닌 여성 노동강도 강화일 뿐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여성 공무원에게도 숙직을 시키려 한다. 그간 여성은 일직(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을, 남성은 숙직(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을 맡고 있었다.

서울시는 남성만 숙직을 담당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 “역차별 우려”를 낳았으며 이런 조치를 합리화한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 비율이 늘어나면서 남녀 간 당직 주기 격차가 1.7배까지 벌어져, 남성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덧붙인다.

서울시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면 이 방침이 다른 공무원들로도 확산될 수 있음이 우려된다. 게다가 서울시 발표는 ‘여성들이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역차별’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방침은 진정한 성평등과는 아무 관계 없다. 이것이 ‘역차별 해소’라는 주장은 평등에 대한 완전한 오해일 뿐이다. 우선, ‘요즘은 오히려 남자가 차별받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여성 차별의 현실을 흐린다.

여성이 남성의 대학진학률을 앞지른 지 오래이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했어도 여성 노동자는 여전히 임금 격차, 높은 비정규직 비율, 경력 단절, 낙태죄,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등을 겪어야 하는 처지이다. 무엇보다 여전히 여성이 양육과 가사의 주된 책임자로 남아 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은 일생 동안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자본가들과 자본주의 국가가 현재와 미래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엄청난 부담을 주로 노동계급과 서민층 가족에게 전가하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처럼 체제에 내재한 성차별을 직시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형식적인 법률적 성평등이 쟁점이지 아니다.

이렇게 특정 집단이 체제 내재적 차별을 받는 상황을 무시한 채 똑같이 대우하는 건 진정한 ‘평등’이 아니다.

신체적 차이

노동조건과 복지 문제에서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여성의 야간 노동 제한이 대표적 사례다. 여성 숙직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옳다. 서울

시는 당직 업무에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첫째, 여성은 야간 숙직 시 벌어질 수도 있는 물리적 안전 위험에 남성보다 취약하다.

이미 여성 숙직제가 도입된 곳에서 다양한 안전 사고가 벌어졌다. 민원인들이 여성을 남성보다 더 만만하게 여겨 시비를 걸 수도 있다. 야간에 주차 단속 업무를 하는 여성 시간제 공무원들도 남성 취객의 괴롭힘에 시달리곤 한다. 성폭력이나 성추행의 위험도 있다. 경찰관이 여성 전용 숙직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일도 있었다.

둘째, 여성 노동자가 육아와 가사의 주된 부담을 떠안은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남성과 ‘등등하게’ 숙직을 시키면 여성 노동자들의 곤경이 가중될 뿐이다. (서울시는 만 5세 이하 양육자 등을 당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이번 방침의 문제점을 약간 완화하는 것일 뿐, 여성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라는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셋째, 상당수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임

신·출산을 경험한다는 생물학적 차이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는 사회의 유지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여성 노동자 건강 보호가 필요하다.

혹자는 임신부만 보호하면 되지, 왜 모든 여성을 보호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가 야간 노동에 자주 시달리면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야간 노동이 잦은 병원 여성 노동자들은 유·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임기 이후 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도 남성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단지 임신부뿐 아니라 모든 여성 노동자에게 보건상 유해한 업무는 금지해야 한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생물학적 차이가 있고 여성이 실질적 차별을 받는데도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다. 오히려 여성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강도 강화일 뿐이다. 이를 ‘성평등’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

연대와 희생

물론 남성 노동자들의 숙직 부담이 커지는 것을 해소할 대안(공무원 대폭 확충 등)이 필요하다. 그런 대안을 남녀 공무원 노동자들이 쟁취하길 바란다. 이 참에 숙직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결국 그렇게 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성취되기 전까지 제기되는 사용자들의 여성 숙직 강

요 문제를 회피해선 안 된다.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에서는 신체적 조건이 더 나은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를 향한 연대를 보여 줘야 한다. 때로는 이번 숙직 문제처럼 불가피하게도 남성 노동자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한다.

남성 노동자들이 형식적인 “형평성”을 앞세워 이를 거부하면,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 차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군다’는 불만이 커져 오히려 여성 일각에서 남성 노동자들에 대한 분리주의가 생겨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쳐, 장차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결된 투쟁에 이롭지 않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를 방지하면, 당장은 남성 노동자들의 부담이 조금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남녀 노동자 모두의 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한 부분의 조건 악화를 지렛대로 전반적 노동조건을 떨어뜨리는 수법을 써 왔다.

“서울시는 여성 공무원 숙직을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최근 이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목소리가 확대되길 바란다.

최미진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창립 1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인터뷰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노조 출범 1년을 축하합니다.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노조는 기간제 교사들을 모으고, 싸울 수 있는 구심점이 됐어요.

지난 1년간 정규직화, 차별 폐지,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농성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노조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되니 교육청, 교육부에 기간제 교사들의 요구와 교섭 등을 당당히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변화입니다.

연대가 확대된 점도 큰 성과입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는 정말 든든한 지지와 연대를 해주었어요.

민주노총 등의 연대와 지지를 받기도 더 쉬워졌어요. 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하고, 기간제교사노조의 활동에 연대와 지지를 요청했죠. 민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들, 특히 비정규직 노조들과 많은 동지들이 노조 잘 만들었다고 하면서 응원해 주고 있어요. 노조가 되니 이렇게 연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힘을 얻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가 누구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전환 제외자가 너무 많고 그나마도 무기계약직, 자회사 등 제대로 된 정규직이 아니에요.

기간제 교사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일 먼저 제외당하면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시급성이 되기도 했지요. 정부가 기간제 교사들이 상시업무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청년 선호 직종’, ‘공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교원 확충 억제 정책으로 청년들을 엄청난 임용시험 경쟁으로 내몰아 왔습니다. 정부의 이런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기간제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런 논리를 내세워 정규직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부뿐 아니라 교육청들도 책임이 있어요. 교육부 전환 심의위원회 이후 각 교육청 별로 정규직 전환심의회 위원회를 열었지만 여기서도 기간제 교사는 제외됐어요. 올해 진보교육감들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째 되는 날인 7월 18일 청와대 앞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요구 기자회견'

이 대거 당선했어요. 진보교육감들은 공통 공약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지 않고 어떻게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나요?

기간제교사노조는 지속적으로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왜 중요한가요?

정규직화는 기간제 교사가 겪는 고용 불안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에요. 정부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면 차별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의 대부분은 불안정한 고용에서 비롯하는 것이고, 비정규직을 양산해 재정을 절감하려는 정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전교조기간제교사특위에서는 휴직 대체 교사들을 일종의 무기계약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또다른 직군을 만들어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규직화는 기간제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온전하게 교육에 전념할 때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온갖 차별을 당하는 교사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겠지요. 불안감, 모멸감 이런 것들을 잊고 교육에 전념하려 노력하지만 이런 조건은 교육에 방해 요소입니다.

노동 조건 개선, 교원 확충 등을 쟁취하려면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미래 교사들이 함께 단결해서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들이 서로 대립하면 교육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비용 절감을 원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지지한다면 기간제 교사들의 요구를 진심으로 조건없이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의 차별은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이행됐나요?

아니요, 그것도 말뿐이었어요. ‘기간제교원제도 운영개선협의회’를 설치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까지 3차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회는 기간제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을 듣고 교육청에 전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꼭 집어서 쪼개기 계약을 막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쪼개기 계약을 정당화하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운영지침’조차 바꾸지 않고 있어요. 이 지침에는 기간제 교사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항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학교의 불편함은 고려하지만 기간제 교사들이 당하는 부당한 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 설립 신고가 반려됐습니다. 이것이 왜 부당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는 기간제 교사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노조 규약에서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고 구직 중인 기간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문제삼았어요. 한 달부터 1년까지 다양한 계약을 맺어 구직과 재직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의 조건을 알면서도 반려를 통보한 것은 기간제 교사의 노조 할 권리를 원천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조 설립은 신고제입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이 알아서 정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을 문제 삼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

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를 교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이 노조 설립신고를 하자, 그땐 교원이라며 교원노조법을 적용해 노조 설립 반려 통보를 했습니다. 교원 자격은 권리를 제약할 때만 사용되는 기준인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에 대해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인권단체, 법률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개의 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조는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계속 싸워 나갈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 주최인 교육감과 면담을 했는데, 어땠나요?

서울시 교육청은 설립 신고 반려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다가 지난 12월 21일에 조희연 교육감과 면담을 했어요. 6개월만에 성사된 면담이었는데 놀랍게도 조희연 교육감은 “기간제 교사의 차별이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재선까지 한 진보교육감인데 학교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있는지 참 기가 막혔습니다.

기간제 교사노조는 교육감에게 기간제교사노조 인정, 정규직화, 학교장에게 위임된 임용권 회수, 차별 폐지, 고용 불안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기간제교사노조의 요구를 이해했다면서 관련 부서에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하고 기간제 교사 문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면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지요. 일단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으니 제대로 논의가 되는지 지켜보며, 계속 저희들의 요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 하나라도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설립 총회 때부터 민주노총 가맹을 추진한다고 결정했어요.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2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가 가입 범위에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은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조를 따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형식 문제가 기간제 교사들이 민주노총의 일원이 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원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민주노총의 일원이 돼 비정규직 철폐 운동을 함께해 나가며 민주노조 운동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후 노조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차별 폐지, 노조 할 권리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큰 논쟁이 있었지만 지난 1년간 활동하면서 우리가 정규직화를 요구한 것이 정당했고 올바랐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기간제교사공대위와 함께 기간제 교사 투쟁의 지지를 확대하는 활동을 할 것이고, 민주노총 가입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를 조직하기 위한 활동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뷰·정리 조명지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박혜성



고(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노동자들이 왕창 참가해야 한다

김인식

“사회에 내몰리고 나라에 버림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상황에서 죽었잖아요.” 그 자신도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 어머니의 피맺힌 목소리이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그러나 체제의 이윤 논리를 신봉하는 자들은 냉혹하다. 김용균 씨의 죽음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모르쇠로 발뺌한다.

고인이 일했던 한국서부발전은 한국 최대의 단일 화력발전소이다. 그러나 비용 3억 원을 아끼려 28차례에 걸친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했다. 지금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도 고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문재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그 래 놓고 또다시 말로 때우려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 어이없는 유체이탈 화법이다. 불법촬영 근절을 요구하는 ‘불편한용기’ 시위대가 외쳤듯이, “문재인이 문제다!”

이 와중에 부아 돌우는 개혁파 정치인이 또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고(故) 김용균 씨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공문을 민주노총에 보냈다. 박 시장 자신이 분향소에 조문하고 페이스북에 조사까지 남겨놓은 뒤에 일어난 일이다. ‘민주노총의 서울시’라는 우파의 가당찮은 비판을 의식한 중도파 정치인의 이중 플레이이다.

물론 우파 정당들의 비판은 가당치 않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미온적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조차 반대한다. 정부 개정안은 재계의 반발에 밀려, 노동계의 요구에 비해 많이 후퇴해 애초의 외주화 금지와 사용자 처벌이 약화됐다. 우파 정당들은 이마저 난도질 하겠다는 것이다.《노동자 연대》 271호에 실린 김문성,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부족하다’ 기사를 보시오.)

그래서 주류 정당들이 합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노동계가 아니라 사용자의 입김이 더 많이 들어간 법안일 것이다.

때마침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문제로

청와대는 곤혹스럽게 됐다. 위선자들이 ‘딱 걸렸다.’ 그러나 진보파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동안 한국당이 이를 건수로 청와대 공세에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이 전선의 향방에 종속돼 있다.

우파 정당들의 반동적인 사용자 편들기 때문에 일각에서처럼 ‘더 이상 후퇴 없이 정부 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정부 안은 지난해 문재인 자신이 약속한 것보다 후퇴했다. 통과해도 실속이 별로 없다. 정의당과 민중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낫다. 국회 의석의 열세 때문에 정부 안 통과를 (마지못할지라도) 지지하는 것은 문재인에게 노동자를 공격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계 지도부들이 우파 정당들은 매우 강하게 규탄하는 반면,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누그러뜨려 사실상 후자가 무사히 빠져나가는 효과가 나게 돼서는 안 된다. 투쟁의 표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협공으로 압박돼 있다. 우파는 청와대 특검반 비위 문제를 고리로 집요하게 공격한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과 후퇴에 항의한다. 특히,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이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현재 항의 운동은 공식적으로는 문재인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온건한 단체들은 문재인에게 책임을 묻기를 꺼린다. 문재인 정부를 너무 몰아붙이면 우파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단견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은 노동 대중의 기대에 (마지못해서라도) 부응하려 하기는 커녕 노동 대중을 배신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의 진정한 본질이다.《노동자 연대》 271호에 실린 ‘노동계약 시도 경계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인가를 보시오.)

이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한국당이 문재인인의 실패로부터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이것은 그림의 오른쪽 부분이다. 그러나 그림의 왼쪽은 노동계급 나름의 대안이 성장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힘을 다해 노동 대중이 문재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가속시켜야 한다. 그래서 투쟁의 표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공범”이다 12월 22일 고(故) 김용균 씨 부모와 범국민 추모제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운동의 확대를 위해

김용균 씨의 사망에 대한 추모와 항의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12월 22일) 서울에서는 1차 범국민 추모제가 열렸다.

이 집회에서 많은 연사들이 고인의 죽음을 “사회적 타살”, “구조적 살인”이라고 성토했다. 그리고 문재인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고인의 죽음을 단지 개인의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처럼 고인을 그리는 행위(추모)는 고인을 죽게 만든 체제와 그 수혜자·수호자들에게 항의하는 행동과 때려야 뗄 수 없다. 항의를 잘하는 게 추모를 잘하는 것이다. 항의 운동이 크게 일어나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회를 진보적으로 전진케 하는 것이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진정한 추모일 것이다.

그러려면 항의 운동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단호해져야 한다. 유류세 인상 반대 투쟁을 한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는 좋은 본보기다. ‘노란 조끼’는 매우 강경하고 격렬하게 투쟁했다. 대통령 마크롱은 큰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결국 유류세 인상 철회를 비롯해 몇 가지 양보 조처를 내놓았다.

조직 노동계급의 대거 동참이 항의 운동을 키울 수 있다. 물론 고인의 죽

음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있다.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청년·대학생들도 커다란 울분을 토한다.

노동자와 청년·학생이 함께 싸우면 항의 운동을 강화할 수 있다. 잘 조직돼 있는 조직 노동계급의 동참이 이 운동에 든든한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참가는 이 운동에 생기와 감수성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 토요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400여 명이 참가했다. 노동조합이 아직 본격적으로 조합원들을 충분히 동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이 항의 운동의 중심에 서면 다른 사회집단이 운동에 참가하지 못할 거라고 본다. 정반대로 틀린 생각이다.

2013년 12월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의 초점 구실을 했다. 그 덕분에 대학가에서 파업 지지 캠페인이 벌어졌다(‘안녕 하십니까’ 대자보 운동 등).

또, 2016년 10~11월 박근혜 퇴진 촛불이 거대한 대중 시위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철도 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선도적 대중 투쟁이었다.

특히, 김용균 씨 죽음은 민주노총이

그동안 매우 중시해 온 비정규직 문제와 직결돼 있다. 그런 만큼 민주노총이 엄호 사격만 하는 지원 부대 구실을 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에게는 최전선에서 지도적 구실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민주노총이 연초에 특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이 항의 운동의 동력을 증폭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런 항의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가 자리잡고 있는 수도 서울을 항의의 중심 무대로 삼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태안 상황을 포기하자는 말이 절대 아니다. 서울에도 투쟁 본거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김용균 씨 사망 운동은 단지 한 사업장의 노사 관계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문제이자,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경제적 권력의 중심은 수도 서울이다. 체제의 수혜자·수호자들이 서울에 몰려 있고 서울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서울에서 특별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 운동을 정치적으로 만들기에 — 계급 대 계급의 투쟁 — 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도자들이 운동의 정치화를 꺼린다면 몰라도 말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직장 □노조 □대학교 □중고등학교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olidarity.org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